

지자체 재정 인센티브제 확대 시행

탄력세율 적용등 3개항 추가 페널티제도는 법개정뒤 실시

지방자치단체의 건전 재정 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재정인센티브제가 이달부터 확대 시행됐다.

행정자치부는 4일 공무원정원감축, 지방세징수율, 경상경비절감, 일용인부절감 등 8개 항목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재정인센티브 제도에 탄력세율 적용, 사용료 및 수수료 현실화, 지방청사관리 등 3가지 항목을 추가해 총 11개 항목에 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정인센티브제는 지자체의 재정 운영 여부에 따라 중앙정부의 보조금인 교부금액을 결정하는 제도로, 재정운영을 잘못된 지자체에 교부금을 줄이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페널티제도와 함께 당초 오는 3월 이후 확대 실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페널티제도는 별도의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인센티브제도만 앞당겨 실시하게 되었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최근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라는 감사원의 권고에 따라 교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사용료 및 수수료 현실화’는 각종 민원서류 발급과 공인 등의 입·출입 요금을 현실화해 수입을 올리도록 하기 위해, ‘지방청사관리’는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지방청사의 건립·운영의 건전화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항목에 포함됐다.

또 ‘탄력세율 적용’은 지자체가 지방세율을 지

방조례에 따라 $\pm 5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눈치를 보느라 올리지 못하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대한매일, 2001. 1. 5(금)]

교통봉사자 과실 사고 대법원 지자체에 배상책임 판결

지방자치단체가 위촉한 ‘교통 할아버지’의 과실로 사고가 났다면 지자체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제2부는 25일 “교통 할아버지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 보험금을 돌려달라”며 ○○화재해상보험이 서울○○구청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구청은 1,05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은 반드시 공무원 신분을 가진 사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사람들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화재해상보험은 95년 5월 ○○구청이 교통 할아버지로 위촉한 김모씨가 교통 정리를 하다 교차로에서 수신호를 잘못해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사고가 나자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준 뒤 소송을 냈다.

[대한매일, 2001. 1. 26(금)]

공공요금 결정방식 변경 검토

총괄원가방식 없애고 가격상한규제등 도입

생산에 들어간 원가에 따라 요금을 정해 온 공공요금 결정체계가 대폭 개편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1일 전기·통신·철도·담배·가스요금 등 현행 공공요금의 결정방식인 '총괄원가방식'을 폐지하고 '가격상한 규제(Price Cap)'나 '잣대규제(Yard Stick)', '이윤분배제(Profit Sharing)' 등 다양한 외국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런 제도가 도입되면 전기 등 공공요금 수준이 공급기업별로 차별화돼 소비자들의 선택범위가 넓어진다.

총괄원가제는 해당 재화의 생산에 소요된 원가에 따라 요금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독점체제에서만 활용이 가능할 뿐 경쟁체제에서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영국에서 주로 활용되는 '프라이스 캡' 방식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특정 재화를 생산하는 기업들에 대해 생산성 향상 의무를 부과한 뒤 3~5년의 기간을 잡아 해당 기간 물가상승률에서 기업별 생산성 향상률을 뺀 수치를 기준으로 요금을 정해주는 방식이다.

여러 업체 중 실적이 우수한 선도기업 1곳을 정해 이를 기준으로 요금을 매기는 '야드 스틱' 방식과 요금을 정해 일정기간 시행한 뒤 사후 이익을 계산해 일부를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이윤분배제'도 도입을 고려중이다.

재경부는 1·4분기 중 외부기관에 공공요금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용역을 의뢰한 뒤 2·4분기 중 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거쳐 개편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대한매일, 2001. 2. 2(금)]

市政상식도 알고 상금도 타고

서울시 직원대상 시정 상식 공모

'시정 상식도 알고, 용돈도 챙기고'

서울시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정 상식을 공모하고 나섰다. 시 직원 누구나 알아야 할 시정상식을 공유함으로써 직원간의 일체감 조성과 시정 홍보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오는 3월 말까지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정 상식을 공모, 채택된 안에 대해서는 격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공모 내용은 각 과별 소관업무 등 시 직원으로서 필수적으로 알아둬야 할 상식이다. 1인당 응모건수는 제한이 없으며 자체 전산망을 통하거나 인사행정과에 직접 접수하면 된다.

서울시는 1개월 단위로 예비심사를 하고 4월중에 본심사를 거쳐 시정상식 100개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예심 통과는 1만원, 본심 통과는 5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한다.

[대한매일, 2001. 1. 18(목)]

‘문제행정’ 시민이 직접 감사

부산시, 3월부터 ‘특별감사관제’ 전국 첫 도입

시민들이 의혹을 제기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사안에 대해 일반 시민이 직접 감사에 나선다.

부산시는 부산시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 가운데 시장이 임명한 해당분야 전문가를 특별감사관으로 하는 ‘시만 특별 감사관제’를 도입해 오는 3월부터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시의 시민특별감사관제는 전국 처음이다.

시민특별감사관제는 조직적인 부조리 개연성이 있다고 지적된 사항, 시민 고충사항 가운데 특별히 감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실시되며 특별감사관은 변호사 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 가운데에서 선정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그동안 시민 의혹 사안에 대해서는 시 자체 감사만을 실시해왔으나 시민들의 의혹을 풀고 설득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이 체도를 운영규칙 제정·공포 등 준비 과정을 거쳐 오는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공식사회에서는 이 체도에 대해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분야 전문가가 나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객관적으로 조사해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는 반면 “각종 민원이 이해당사자들의 복잡한 입장을 조율하면서 처리되고 있는데도 시민감사관이 이러한 조정행정의 어려움을 얼마나 이해하고 감사에 나설지 의문”이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다.

[대한매일, 2001. 1. 3(수)]

실무담당자 직접 시장 결재

대구시 5급이하 공무원

업무효율성 제고 겨냥

대구시는 5급 이하 실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직접 시장 결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시장의 시정추진 방향과 뜻이 실무자에게 직접 전달돼 정확한 정책이 입안, 집행되고 하위직 공무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하위직 공무원 시장 직접결재제’를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지금까지 사안에 따라 실·국장 또는 과장이 시장에게 결재 및 보고를 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초작업은 5급 이하 실무진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실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직접, 시장에게 보고나 결재를 함으로써 의사전달 과정을 축소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직접 결재는 매주 목요일 오후에 실시된다.

[대한매일, 2001. 1. 11(금)]

“국장실 폐쇄 · 비서실 통합”

광주 광산구 年5,200만원 절감

광주 광산구가 국장실을 없애 연간 5,000여만 원의 인건비를 절감하는 등 각종 업무의 효율성 높이기에 나섰다.

광주 광산구는 11일 오후 구청장과 부구청장 비서실을 통합하고 국장들의 자리를 실무부서에 전전배치, 4명의 비서실 직원을 줄여 연간 5,200만원의 인건비를 절감하게 됐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또 그동안 5~6단계를 거쳐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결재단계를 3~4단계로 대폭 축소하고 보고와 회의시간을 단축하

는 등 일하는 방식을 개선했다.

대민업무도 비효율적인 부분을 제거하고 부구청장 직속으로 복합민원처리팀을 가동해 민원인에 대해 행정서비스의 질을 대폭 향상시키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정기적인 확인평가를 통해 우수 부서에 대해 포상을 하는 등 업무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한매일, 2001. 1. 12(금)]

울산시 동구 1억이상 관급공사

他부서 평가반이 감사

울산시 동구는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총공사비 1억원 이상의 관급 공사에 대해 해당 공사와 관련없는 다른 부서 직원들로 '부실방지 평가반'을 구성, 공사를 감사토록 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부실방지 평가반은 구청이 발주하는 공사와 전혀 관계없는 부서 소속 건축 및 건설전문직 공무원 3~4명으로 구성된다. 평가반은 적정시공, 불법하도급 거래, 현장 안전관리실태 및 안전관리자 지정, 공사예산 책정, 관급자재 적정 수급, 감리원 근무상태, 일감감사지적사항 보완여부 등을 1~2차례 실시한다.

평가반에 적발된 내용은 곧바로 구청 감사계와 구청장에게 보고해 사실로 확인되면 해당 공무원 경고와 함께 인사고과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 해당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발주 공사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부실공사 평가반이 구 예산절감과 부실공사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한매일, 2001. 1. 10(수)]

톡톡 튀는 공동브랜드 잇따라

서울성북구·성남시등 지자체 상품특화 적극 홍보·판로 지원

“트리즘, 어울리오란 브랜드를 들어보셨나요”
자치단체들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
세 중소기업의 상품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잇따라
공동브랜드를 내놓고 있다.

서울에서는 성북구가 처음으로 98년 ‘트리즘
(Trizm)’이란 공동브랜드를 개발했다. 27개 임
가공업체가 참여해 스카프와 운동복, 구두등 60
여개 품목을 만들어 수출까지 한다. 공무원들이
직접 판촉활동에 나설 정도다. 트리즘이란 삼각형
이란 뜻의 영어 triangle과 sensualism(관능주
의)의 합성어다. 용산구는 기존 공동브랜드 ‘미르
빌(Mirvil)’ 외에 스웨터 등 편직물 공동브랜드인
‘지지(XiXi)’와 이태원 일대의 가죽 및 모피 공동
브랜드 ‘틴빅(Tinvic)’, 가방류 공동브랜드인 ‘가
비앙(Gaviant)’ 등 4종을 개발, 최근 특허청에
상표출원 절차를 마쳤다. 업종별로 공동브랜드를
다양하게 개발, 지역상품을 특화하기 위해서다.
중랑구는 지난해 10월 ‘더조아(Thezoa)’를 만들
었다.

경기도 성남시는 지난해 말 공동 브랜드 ‘어울
리오(Oullio)’를 개발했다. 우리말 ‘어울리다’와
감탄사 ‘오’를 합친 합성어다. 보석과 시계, 피혁,
신발, 단추 등 62개 품목에 사용할 예정이며 중
기공동브랜드협의회를 구성하고 조만간 법인설
립도 추진할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공동브랜드는 자치단체가
홍보에서부터 판로까지 지원하고 있어 짧은 기일
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며 “브랜드 인
지도가 일정 궤도에 오를 때까지 지속적인 관리

활동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한매일, 2001. 1. 16(금)]

공무원이 소송업무 처리

경북도 1년새 15건 승소, 예산 4,700
만원 절감

경북도는 도가 당사자가 되는 각종 소송과
국가를 피고로 하는 소송업무를 변호사에 위
임하지 않고 공무원이 직접 처리해 예산 절감
은 물론 승소율을 높이고 있다.

8월 도에[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도나 국가
관련 소송 64건 가운데 44건을 공무원이 직접
담당했다. 국가소송이 16건, 행정소송 15건,
민사소송 13건 등이다.

이 가운데 확정 판결이 난 것은 16건이며 1
건을 제외한 15건을 승소했다. 변호사에게 소
송을 위임할 경우 지급해야 하는 소송비용
4,770만원의 예산도 절감했다.

특히 승소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던 안동
댐 가두리양식장 연장허가 불허가에 따른 손
실보상금 청구소송 등을 이겼다. 도 관계자는
“관계 공무원들이 사건 원인분석은 물론 정부
기록보존소와 국회도서관 등에 보관된 증거자
료를 수집하고 관련자를 면담해 증인을 확보
하는 등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처한 결과”라고
말했다.

[대한매일, 2001. 1. 9(25)]